

# “MB 비리 발본색원이 적폐청산 완결”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다스는 누구건가” 검찰 수사 가속화 촉구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 시작조차 되지 않아...정황 차고 넘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민들이 분노 있다. 그런데 다스는 누구 건가”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가속화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저는 한 달 전부터 적폐의 뿌리가

자 총본산적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당장 소환조사하고 그 일당이 벌인 전인공노할 범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직접 수사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부진, 좌고우연의 이유

가 뭔가 도대체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며 “정호용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비자금 120여원은 공소시효가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7일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가 이 전 대통령과 정 특검을 횡령·배임 및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0월13일 BBK 주가조작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김경준의 스위스은행 예치금 140여원을 당시 청와대가 개입해 다스가 가로채도록 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한 상태다. 지난달에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다스 지회사 대표가 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어제 JTBC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1996년 서울 종로 국회의원 선거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다스 직원 십 수명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정황까지 보도했다”며 “이 외에도 이명박 정권 초기 다스의 매출이 급격하게 불어난 사실, 다스가 190여원의 자금을 별다른 실적도 없었던 신생회사 BBK에 투자한 사실 등 이미 확인된 것만으로도 실소유주에 대한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국정원 댓글공작,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정치공작, 문화예술계 탄압, 방송장악, 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태광산업 불법 세무조사 등 적폐 백과점을 방불케 할 정도”라며 “너 이상 수사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물론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각종 비리와 정권 차원에서 벌인 국가기관 행위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그것이 적폐청산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경환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될까...가결 시 ‘역대 14번째’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로 기록된다.

일단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체포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이 과반수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 내부적으로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는 동의하지 않되,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현재 12월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로 오는 23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본회의는 22일 한 차례만 잡혀 있다. 현직 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끝나는 24일부터는 불체포 특권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한편 역대 체포·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최 의원을 포함해 총 57건이다. 이 중 13건이 가결됐고 나머지는 부결되거나(14건) 폐기됐고(23건) 영장청구 철회된 사례도 있다.

## 홍준표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이 국민정서 맞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같은 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 “한국당 국회의원이 (체포동의안) 문제에 연루됐을 때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일본 방문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와 상

의해 봐야겠지만 (본회의 불출석) 관례를 이반 국회에서 적당하는 것도 국민감정에 맞는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라는 것은 야당 탄압에 반대하기 위해 생긴 조항”이라며 “그래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데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탄압이냐 아니냐 여부만 가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논란 해명은 하지만...” DJ 비자금 제보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논란에 관한 해명을 하고 있다.

## 5·18 특별법, 국방위 의결 무산...공청회 후 처리기로

### “위원들 의견 달라 개최...일정은 합의 통해 정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5·18 관련 특별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반대해 결국 불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2건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방위 소위에서 해당 법률을 놓고 여야 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친 뒤 1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이날 법안 심사에 앞서 국방위 소위원장이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의당 김동철·최경환 의원과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을 하나로 통합 지정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하고자 한다”며 소위에서 5·18 특별법

을 의결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경 의원은 “5·18 당시 민간인 학살, 사망상해 실종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규명 조사위를 만들어 2년 활동, 1년 이내 범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진상규명 조사위 사무처를 두되 실무위, 자문기구 등 두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조사 대상에 대한 출석, 진술, 자료제출, 동행명령, 압색영장 청구 등 권한을 줬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진상규명 특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결도 요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 58조에는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중요 절차인 만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공청회 생략 선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 못하다”며 공청회 개최 입장을 고수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 역시 “법안의 취지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위원들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일정은 추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정하겠다”며 공청회 뒤로 의결을 미뤘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무료상담환영”